

201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2)

< 2011. 11. 13(일) 12:20 인문계 2교시 >

| | |
|-------------|--|
| 감독위원 확 인 | |
|-------------|--|

| | | | |
|------|--|------|--------|
| 모집단위 | | 전형유형 | 일반학생전형 |
| 수험번호 | | 성 명 | |

☐ 답안작성 유의사항

가. 답안작성 시간은 120분이며,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나. [문제 1]부터 [문제 4]까지 각각의 문제번호를 쓰고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 사용가능)

라. 답안지에 답안과 관계없는 인적사항 관련 내용을 작성·표기하는 경우 결격처리합니다.

마. 답안지와 문제지 해당란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 2)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정의(正義)와 관련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핵심 논지를 서술하시오. (25점)

<제시문 1>

정의 관념의 핵심을 이루는 형평성(equity)은 다소 복잡하고 도전적인 개념이지만 통상 합당한 자기의 몫을 갖는 것 또는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준다는 ‘응보(應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적절한 응보란 관련된 구성원에게 어떤 행위와 상황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처벌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본주의에서의 적절한 보상은 재능과 결단력, 개인적 투자, 리스크 부담, 고된 노동, 그리고 실적과 관계된다. 한편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다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할 때, 또는 사기에 가담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에 계약한 협약에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그들은 사실상 타인을 착취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에게 동등한 보상을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제시문 2>

효율성의 가치는 윤리체계의 한 구성요소이지만 반드시 유일하다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법원은 효율성 이외의 다른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법의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正義)는 효율성 개념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는 법을 지배하는 가치임에 분명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현실에서 불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것은 재판도 없이 유죄로 간주되거나, 정당한 보상도 없이 사유재산을 수용당하는 경우, 또는 부주의한 운전자가 손해를 끼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법이 이러한 행위들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원이 희소한 세계에서 자원의 낭비는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3>

평등한 기회란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동등하게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각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같은 기회의 균등에 위배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고용주나 지주가 사람을 인종, 성, 나이에 따라 차별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기회균등을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어떤 아이들은 시설도 좋고 실력 있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학교에 다닌다면 기회가 불균등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차가 없어서 집 근처 구멍가게에서 물건 값을 비싸게 지불해야 한다거나, 용자받을 때 자신의 차종, 성 혹은 거주 지역 때문에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면 이 때 기회는 균등하지 않다.

<제시문 4>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민으로서 행복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로부터 마땅히 동등한 관심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종종 형식적인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실현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조건의 문제까지 포괄한다. 예를 들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 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재화를 소유한다는 것은 모두가 자신의 권리행사에 필수적인 만큼 적절한 교육을 받고 빈곤에 의해 결정적으로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생활수준을 누린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결국 한 사회 내에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진다.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고 모든 이에게 성공할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제시문 5>

대부분의 사고는 과실(negligence)이라고 하는 법의 항목에 해당된다. 사고의 발생확률과 예방에 드는 비용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하여 1947년 러니드 핸드(Learned Hand) 판사는 명철한 분석을 법률에 적용시켰다. 핸드 판사의 과실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해를 입을 확률을 P, 상해로 인한 총피해액을 L, 예방에 드는 비용을 C라고 할 때 총피해액의 기댓값이 예방에 드는 비용을 초과할 경우, 즉 $P \times L > C$ 일 경우에만 과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계편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만 안전설비에 투자하도록 법원이 유도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원한다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부담을 감수한다. 그 위험부담이 어떤 때에는 지나치게 높고 어떤 때에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낮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핸드의 공식은 참으로 유용하다. 핸드 이후 지금까지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꾸준히 이 공식을 개량해 왔지만 원래 공식에 갖는 경제학적 운치는 계승되었다.

논술시험 (인문 2)

[문제 2] [문제 1]의 두 입장 각각에 근거하여 <보기 1>의 결정을 평가하시오. (25점)

<보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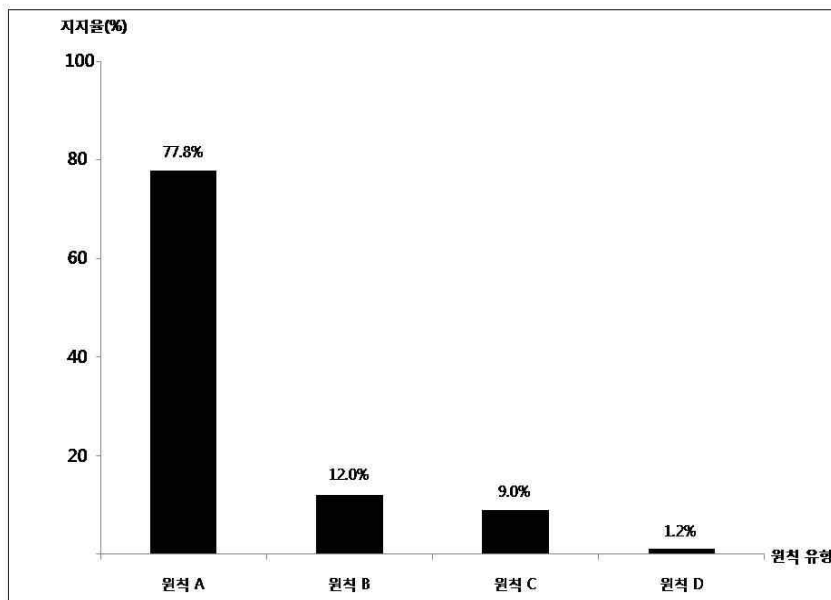
오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온 여인숙 인근에 학교가 들어섰다.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다. 현행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피하려면 여인숙은 이전하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여인숙 주인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결정 이유 요지의 일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유해환경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여관영업을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관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내지 여관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인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할 수 없는 결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3] 아래 <그림>에 나타난 조사 결과를 [문제 1]의 입장들에 근거하여 해석하시오. (25점)

정치학자 노먼 프롤리히(Norman Frohlich)와 조 오펜하이머(Joe Oppenheimer) 등은 정의로운 분배원칙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A: 모든 사람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한 후에 평균소득을 최대화하는 원칙
- B: 1인당 소득을 최대화하는 공리주의적 원칙
- C: 빈부격차를 최소화하는 원칙
- D: 최소수혜자의 최소소득수준을 상향시킨 롤스의 차등원칙

응답결과는 아래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다.



<그림> 정의로운 분배원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제 4] [문제 1]의 입장들에 근거하여, <보기 2>에 소개된 제도 도입의 취지를 평가하시오. (25점)

<보기 2>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의 약 90%가 유죄인정을 전제로 형량을 감해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로 해결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7월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면받는 등 수사권 강화를 위한 몇몇 제도들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플리바게닝 제도가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